

WOW의 총학생회칙 개정에 반대하는;

제1회 라.신문

총학생회 총투표, 사건은 이렇다!

■ 3월 15일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 총학생회장이 학운위 무산
공고, 이에 반대하는 확대운영위원들과의 실랑이
끝에 가까스로 정기 학운위 개최, 총학생회장이 휴
회시간에 '연세사회에 드리는 글' 발표 (총여 폐지
와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언급 없음)

■ 3월 19일

총학생회장의 <총학, 총여 대체 기구 검토 중> 인
터뷰 기사가 연세 춘추 1면에 실림.

13차 중운위 : 총여학생회가 임시 학운위 안전상
정, 중운위원 2/3 찬성으로 소집 발의, 학운위의
의장인 총학생회장의 학운위 소집 공고 의무 불이
행으로 44대 중앙운영위원회가 임시 학운위 소집
공고할 것을 의결

■ 3월 21일

44대 중앙운영위원회 - 임시 학운위 소집 공고
총학생회 -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안을 안전으로
한 학생 총투표 공고

■ 3월 23일

총여학생회 임시 학운위에서의 총학생회칙 개정 안
건 상정 철회 총학생회의 회칙개정과 총투표에 반
대하는 퍼포먼스 진행

■ 3월 24일

총학생회 - <연세학생사회에 드리는 글 2> 발표,
3월 26일부터 학내 곳곳에 총투표에 관련한 의견
수렴 설치하겠다고 약속.

■ 3월 26일

임시 학운위 개최 : 4시간동안의 토론을 통해 총학
생회의비민주적 총투표 발의에 문제제기하는 44대
확대운영 위원회 입장글 의결, 총학생회장, 부총학
생회장의 학운위 불참

■ 3월 31일

총학생회 - 학내 언론에서 주취하는 총투표 공정
회에 불참 의사 밝힘

■ 3월 27일

14차 중운위 : 총투표 관리 위원회 설립 논의

■ 4월 2일

15차 중운위 : 투표관리 위원회 구성 의결

■ 4월 4일 이후 3일간

총여학생회, 학내 여학생 모임들과 함께 총여학생
회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리는 마당 사업 진
행.

■ 4월 6일

총학생회 - 연세 춘추 주취의 총투표 과당회 불참
의사를 밝힘,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론
회에 참석할 패널 신청을 받은 뒤 찬반 양쪽의 수
를 동일하게 하여 패널을 선정, 연세 춘추와 YBS
가 중계, 보도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
힘, 공개토론회 일시와 장소는 아직도 공지하지 않
은 상황

■ 4월 11일

총학생회 - 총투표 관련 의견수렴할 설치



'탈정치'를 말했던 총학생회, 그러나 너무 정치적인

총학생회의 정말이지, 'WOW한' 상식

아카라카와 연고제 때가 아니면 조용했던 연세 캠퍼스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학내 곳곳에 경쟁하듯이 대자보가 나붙고, 평소 학생회 문제에 무심했던 사람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을 내뱉었다. 바로 지난 3월 19일, 연세춘추 1면에 '총여학생회 대체 기구 검토 중'이라는 총학생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이 그 시작이었다. 놀라웠던 것은 춘추 기사가 보도되기 불과 4일 전에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던 총학생회가, 느닷없이 총여학생회를 폐지한다며 총투표 공고를 선언한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의 모임인 학운위를 완벽히 무시하는 것이, 그토록 '세계적 상식'을 운운하던 총학생회장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전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총투표 공고가 그만큼 절차적 민주성을 무시한 총학의 독단적 결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이유가 어쨌든 간에, '총여 폐지'는 이번 총투표의 하나의 시작일 뿐이었다. 총여학생회 폐지 문제로 학교가 한참 시끄러울 때, 딱 하니 등장한 것이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안'이었던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한 장의 대자보로 4월 30일부터 총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총학생회에, 학생들은 어찌된 상황인지도 모른 채 'YES or NO' 만으로 대답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2면에서 계속)

(1면에서 이어짐)

‘깨끗한 연세를 주문한다’던 당신, 그러나 남은 것은 ‘정치 꿈수’ 뿐.

지난 3주의 시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총학생회장의 직권 발의로 총투표 공고가 되었고, 회칙 개정안 전문도 발표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많은 학우들이 이번 총투표의 실행을 단순히 ‘총여학생회 폐지’, 혹은 ‘한총련 탈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보다 앞서 총여학생회 폐지를 선언한 총학생회장의 언론플레이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20년만의 학생회칙 개정’이라며, 마치 노무현과 같은 깜짝 개정론을 선보인 총학생회는 왜 하필 총여학생회 폐지 문제를 전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애초 ‘탈정치 총학생회’라며 출발한 WOW 총학의, 무섭도록 정치적인 ‘꿈수’를 읽을 수 있다. 스타벅스 커피만 마셔도 된장녀 소리를 듣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밝히는 순간 곧 싸늘한 시선에 직면해야만 하는 한국 사회에서, ‘총여’를 없앤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었으리라. ‘총여 폐지’, ‘상급단체 가입 제한’을 앞세워 이번 총투표를 성사시키려는 총학생회의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는, 결국 회칙 개정안의 다른 문제점들을 은폐하며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정치 꿈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총학생회장님,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과정이 어찌되었든 총투표는 다가오는 30일부터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회칙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총학생회의 약속은, 공청회의 번번한 무산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학내 곳곳에 설치한다고 했던 의견 수렴함은 애초 약속했던 시간보다 보름이나 지난 후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회칙 개정안에 그 의견들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창조자 제시되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3월 31일 언론출판협회의 공청회 제안을 거부한 이후에도, 4월 6일로 계획되어 있던 연세추추의 공청회 제안조차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일부 정치 학생들로 방정식이 꼭 차고 편향된 분위기로 흐를 것’이라는 점, 그러나 총학생회에 묻고 싶다. 총학생회는 비공개 간담회가 아니면 참석할 수 없다고 춘추 측에 밝혔는데, 그것이 총학생회 회장이 말하는 ‘여론 수렴’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총학생회장이 누차 언급하고 있는 ‘일부 정치 학생’이라는 표현은, 총학생회의 회칙개정안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학생들을 모두 ‘총투표에 대한 조직적 기만행위’²⁾로 낙인찍는 음모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총학생회의 태도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그 어떠한 의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탈정치’를 말했던 총학생회, 그러나 너무 정치적인.

‘20년만의 회칙 개정’이라며, 한 나라로 치면 헌법과도 같은 총학생회칙 개정을 무섭도록 빨리 진행시키고 있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며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정치 꿈수로 돌파하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론. 이번 사건에서 그 둘은 정말이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깨끗한 연세를 주문한다’던 WOW총학생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도 욕했던 ‘영악한 운동권’들보다도 더욱 영악한 정치적 술수로 이번 총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가 이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 0) 4월 6일, 총학생회장의 입장글 <언협 주관의 공청회에 대한 입장 및 공개 토론회에 대한 안내>
- 0) 3월 31일, 총학생회장의 입장글 <총투표에 대한 조직적 기만 행위 및 투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학생회란 무엇인가?

- 1980년대 후반,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인 싸움의 성과로 설립된 조합(Universitas) 기구. 학업 및 생활을 함께 하는 일상 집단이기도 함. (ex. 시간표 함께 짜기, MT 가기 등등)
- 학생회 설립의 역사적 배경 : 군부독재 시절, 학교와 이해를 같이 하는 학도호국단이 있었으나 이 기구는 사실 군부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ex. 학내에서 군사훈련 실시 담당, 기강 담당, 데모 참가자 색출 등) 그래서 참다못한 학생들의 자생적인 요구로 학도호국단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학교와 별도의 이해를 갖는 학생조합을 설립하게 됨.

1. 학생회의 구조(현 회칙 상)

- 과/반 학생회 및 단과대 동아리 연합회 :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만이 대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단과대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의 1/2의 투표율, 총여학생회는 전체 여학생(재적생) 중 1/2의 투표율, 총학생회는 전체 재적생 중 1/2의 투표율로 선출되어야만 대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각 기구의 구성(현 회칙 상)

- 학생총회 : 전체 재적생 중 1/10(약 2천명) 이상의 학생이 모여야 성사됨. 최대 한 학기에 한 번.
- 총투표 : 전체 재적생(약 2만명) 중 1/2 이상의 투표가 모여야 성사됨.
- 확대운영위원회 : 직선제로 뽑힌 과/반 회장, 단과대 회장 및 부회장,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총여학생회장 및 부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 단과대 동아리 연합회 회장 등. 총 104명이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사됨.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한 학기 한 번. 급할 경우 비상확운위 열 수 있음.
- 중앙운영위원회 : 단과대 회장, 총여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총 20명이고, 이 중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회의가 성사됨. 만장일치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2/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됨. 일 주일에 한 번. 급할 경우 비상중운위 열 수 있음.
- 총학(44대 wow총학) :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집행부.
- 총여(19대 inside OUT) : 총여학생회장 및 부회장, 집행부.
- 의결 기구의 위상
학생총회 > 총투표 > 확대운영위원회 > (단대운영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

회칙 개정안 분석

(1)대의기구의 분리와 총학 집행부로의 권한 집중

- 기존 회칙의 대의기구 의결구조

확운위 > 중운위 > 총학 (교집합 관계)



=> 총학 집행부가 사업을 계획하거나 예산을 짜오면 반드시 중운위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함. 중운위는 단대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총학생회의 사업을 의결, 총학 집행부원 인준은 확운위에서 가능. 따라서 집행부는 사업 시안을 짜거나 회의에서 발언하는 역할, 즉 '행정과 실무'의 역할만 담당할 수 있음. 보다 높은 민주적 대의 기구에서 총학생회 사업 전반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함.

- 개정안에서의 구조

확운위(과/반 정,부회장) --(심의 및 견제)--> 총학
중운위(단과대 정,부회장) --(심의 및 견제)--> 총학



=> 총학, 중운위, 확운위가 서로 분리되며, 기존에 총회장이 중운위원장, 확운위원장이었으나 이제는 각 위원장을 따로 선출. 상설 의결 기구였던 중운위의 위상이 심의견제기구로 격하되어 총학 집행부에 '자문'만 할 수 있음. 중운위 의결 사안을 총학 집행부에 강제할 수 없음. 즉, 상설의결기구인 중운위가 심의기구가 되면서 총학 집행부가 실질적인 정책결정 역할을 담당.

-확운위 의결 사안이 늘어남. 그러나 정기확운위 개최 회수의 변동이 없어 상시적으로 열리기 어렵고, 단운위-중운위로의 수렴 통로가 총학까지 닿지 않게 되므로, 총학 집행부가 행정뿐만 아니라 사업을 단독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상설 의결기구로서의 단운위의 의미가 사라짐.

-분리되었다고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의결사항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사라져 견제의 효력이 상실됨

(2) 일상적 의견수렴 통로(단운위-중운위-총학)가 사실상 붕괴

-기존 회칙의 대의기구 구성원 -

확운위(104명, 과/반 회장, 단대 회장 및 부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 총여회장 및 부회장, 총회장 및 부회장) > 중운위(19명, 단대 회장, 동연회장, 총여회장, 총회장 및 부회장) > 총학(총회장 및 부회장)

=> 구성원이 중첩됨으로써 단운위-중운위-총학으로의 빠른 의견 전달이 가능. 기존에는 정족수를 간신히 넘겨 확운위가 성사되는 날이 많았음.

-개정안에서의 구성원 -

확운위(132명, 과/반 회장 및 부회장) > 중운위(30명, 단대 회장 및 부회장) > 총학(총회장 및 부회장)

=> 확운위 성사가 더욱 어려워짐.(확운위 의무 참석 조항이 있긴 하나 무기력한 조항이고, 부회장을 아예 뽑지 않는 과/반도 많음) 중첩 구조가 아니라 단운위 혹은 각 과/반의 의견을 상설적으로 수렴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없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 산하 상설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중선관위의 중립성 상실.

기존 회칙에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중운위 안에서 위원을 분배하고 선거 세칙 의결, 선거 운동 관리 등의 역할을 도맡아했음.

개정안, 총학 산하 상설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설 기관으로 바뀜. 중선관위의 자격(추천자) 제한이 낮아짐.

=> 중선관위가 총학 산하 상설기구가 됨으로써 기존의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됨.

(4) 탄핵소추안이 삭제되고, 총학의 일부 기능 및 권한의 정지만 가능하게 됨

-기존 회칙, 최소한의 장치로서 탄핵소추안-

확운위의 업무 및 권한 조항에 명백하게 '총학생회 정,부회장 탄핵'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

=> 확운위의 탄핵권은 총학의 독재나 횡포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적 견제 시스템으로 매우 중요한 것임. 그러나 이것을 삭제하고 기능 정지권(기능 정지와 탄핵은 3일 정학과 퇴학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만 명시한 것은 사실상 총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확운위가 결정적으로 견제할 수 없게끔 해 놓은 것. 이를 통해 '확운위의 권한을 최대한 높였다'는 wow총학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 수 있음.

-개정안, 기능정지만 가능, 탄핵기능 사실상 없음-

'탄핵' 권리가 빠지고, 총학 집행부의 일부 기능 및 권한 정지만 가능해짐.

(4) 총여학생회 폐지, 성평등위원회로 개편.

-기존 회칙, 여학생의 대의기구로서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 대표자는 선거로 선출되며 총학과 다른 별도의 특별기구이고, 회장이 중운위원, 회장과 부회장이 학운위원의 자격을 얻음. 성평등 자치규약을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한 후 제정, 학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침. 재정은 전체 학생회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분배받음.

-개정안, 총학 산하의 성평등위원회-

총여학생회 사라짐. 성평등위원장을 여학생처,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 또는 중운위원이 추천해서 학운위에서 임명함. 그러나 여성주의 소모임의 범위는 목적과 행위(?)를 근거로 중운위가 규정함. 규약의 제정은 할 수 없고, 각 기관과 총학에 '협력'을 구할 수 있음.

=> 이는 곧 자치단위를 총학생회장의 회칙 개정 발의로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기존 여학생 대의기구로서의 총여학생회가 폐지되고 총학 산하 상설기구가 되면서 기존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됨. 또한 대표자를 여학생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임명, 인준의 형태로 바뀔으로써 위상이 낮아짐. 총학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음. 기존 성평등자치규약의 효력 또한 담보할 수 담보할 수 없다.

(4) 동아리 연합회가 중운위에서 빠지고, 총학 산하 상설기구로 편제됨.

-기존 회칙, 정체 동아리의 대표로서 중운위 자격 부여-

동아리 연합회장은 중운위와 학운위의 구성원으로써 소속 동아리 학생들의 이해를 대변했음. 재정은 전체 학생회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분배 받음.

-개정안, 동아리연합회 중운위,학운위 자격상실-

동아리 연합회장의 중운위, 학운위직이 사라지고 예산 또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됨.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총학 집행부에 '의견만 제안'만 할 수 있게 됨.

=> 총여학생회처럼 아예 기구 자체가 폐지되지는 않으나, 연합회의 위상이 많이 낮아져서 사실상 총학 집행부가 거절하면 어떤 독자 사업도 할 수 없게 됨. 연합회장의 선출은 연합회의 자치규약에 따르고 있어서 임명, 인준하는 여타 위원회들과는 차별을 보이나, 이는 곧 성평등위원회의 조항이 '대의기구로서의 총여학생회 그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임을 증명하는 것.

(6) 총학이 외부 단체 가입, 연대, 지지성명 발표 시 학운위의 인준을 받게 함.

-기존 회칙-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 학운위에서 인준-

총학이 외부 단체 가입, 연대, 지지성명 발표 시 학운위의 인준을 받게 하고 그 전에는 어떠한 학외 활동도, 지지 성명 발표도, 연대사업도 할 수 없음.

=> 외부 단체 가입 시에 학운위의 인준을 받는 건 업그레이드된 조항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여기서 wow총학의 타깃이 되고 있는 '한총련'은 원래 '가입제'가 아님.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 현재 회칙에서도 단과대 대표들이 한총련 대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단운위의 인준을 받아야 함.

=> 학내 사안과 학외 사안이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04년 고교 등급제 비리, 03년 기역 입학제 논란 등에 대해서조차 신속한 입장 표명의 길이 막힘. 뿐만 아니라 기존 학생회의 독자적 사업이었던 연대 장터,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 및 환활 등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짐.(학운위는 한학기에 한번인데 각종 사업은 주단위로 이루어진다.)

<오 한백의 -잘생긴 곰탱이의 꿈수->



개정안에는 몇 가지 장점(조항 정리, 회의록 공개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조항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그럼 에도 조항별 찬/반이 아닌 통째로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자치활동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WoW의 학생회칙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네 멋대로 하지 마라

휴학생인 탓에 아무래도 학교 소식을 잘 빠르게 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총여학생회가 총학생회 산하로 들어가게끔 학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중대한 소식도 불과 며칠 전에야 알게 되었다. 총여학생회가 총학생회 산하의 조직으로 개편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의 위상을 가진 총여학생회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총학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는 또한 이런 입장이 올라와 있다.

"총여학생회의 개정안만 보더라도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고민이나 직무권한의 증진에 따른 혼란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민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학우 여러분, 저는 학생사회가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회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개혁은 회칙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회의 모든 활동 근거는 회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학생사회가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 총학생회의 이런 순수한(?) 취지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총학생회는 이만 연세인의 총투표를 통해 회칙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만이 민주주의는 아니며,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총투표를 통해 학칙을 개정하는 것 자체는 좋다. 그런데 그전에 얼마나 많은 학우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는가. 학칙 개정을 한다고 공표하고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 역시 일방적으로 공표하기만 하면 그만인가. 지금의 학칙 개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가지는 학우들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수에게 지지받기에만 급급한 총학생회의 태도를 과연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총학생회는 언론출판협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참석하지 않고 지금의 논쟁적인 상황을 회피한 채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으니 학우 여러분은 제발 저희를 지지해달라는 유아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심지어 외부인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연세권집위원회 내부의 커뮤니티의 글을 퍼오는 정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함께 중운위를 꾸려나가고 있는 다른 중운위원들의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총학생회 집행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자세에는 대의민주제의 기본조차 결여되어 있다. 알고 보면 형식 민주주의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민주제라는 형식에만 매몰되고 자아도취 되어서, 소수의 의견까지 존중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애초에 멀리 내팽개친 상태고, 대의민주제의 형식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지금의 총학생회의 태도를 합리성과 민주주의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만이다.

또한 애초에 총여학생회를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 개편하려는 시도 자체에 합리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총학생회는 여남 관계없이 모든 학우들이 학생회비를 내고 그중 일부가 총여학생회비로 쓰이는 데도 남학우들은 총여학생회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다면서 소위 '수혜자 부담 원칙'을 들어 이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총여학생회를 비판해온 많은 학우들이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주는 만큼 받는다는 이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로 사회의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국가 정책도 따져보면 수혜자 부담 원칙을 지키는 것들은 별로 없다. 만약 이 사회가 수혜자 원칙을 온전히 지키는 사회라면 국가는 재벌의 경영 확장에만 온힘을 쏟아야 하며, 흔히 경제적으로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노인, 어린이를 위한 복지정책은 싸그리 없애야 한다. 수혜자 부담 원칙이 온전히 지켜지는 사회를 원한다면, 굳이 인간 사회에서 이를 찾으려 하지 말고 정글에 들어가 직접 약육강식의 법칙을 체험하면 될 것이다. 결국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들의 평등과 복지가 실질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총여학생회의 존속 문제 또한 단순히 수혜자 원칙에 의거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학내에서 여전히 장애여성이나 비장애여성, 성소수자가(이들을 일괄적으로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아니며, 다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소수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지칭한 것이다) 자신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고, 직간접으로 차별을 받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면 여성주의는 여전히(그리고 당연히) 필요

하며,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이 받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할 총여학생회 또한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학내에 아직도 남녀차별이란 게 존재하는가? 또한 학내에 여성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총여학생회뿐인가?

몇몇 학생들은 학교에 무슨 남녀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묻는다. 자신들은 전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눈에 띄는 차별은 현저히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다. 이성폭력학칙이 있고, 심지어 생리결석제와 여학생전용휴게실까지 있으니(!), 차별은 커녕 오히려 여학생 위주로 학교가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이성폭력학칙과 생리결석제, 그리고 여학생 휴게실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며, 여전히 과/반 활동과 수업에서 여학생들은 일상적인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과/반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OT와 MT에서 행해지는 과도한 술자리나 그들만의 거친 응원과 인사법(FM), 그리고 언어성폭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학생들에게, 혹은 남성적 문화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남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불편해한다면 그는 곧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과/반의 아웃사이드로 밀려나게 된다. 남성적 문화가 일상화된 과/반 학생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편해하기보다는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여학생들은 남성화된 여성이나 여성성이 극대화된 여성으로서의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받는다. 남성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명예남성이 되든지, 아니면 과/반의 꽃이 되든지, 이도 저도 아닌 채 남아있다면 계속되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다면 '넌 왜 그렇게 예민하냐?'라는 소리를 듣는 게 일수일 것이다. 한 개인의 불편함은 예민함으로 치부될 뿐, 진지한 공적 문제로 논의되지 않는다. 그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면 되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은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성적,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한 개인이 갖게 되는 불편함에 대해, '억울하면 니가 적응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여성주의다.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지금, 과거처럼 여성주의를 단지 맹목적으로 반대하거나 배타적으로 남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교양으로서의 여성주의를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그러나 과연 여성주의가 생활로서 체화되었는지를 자문한다면 대답은 여전히 No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페미니즘이라는 편견 속에 사로잡혀 여성주의를 바라본다. 남성에 반대하는 것이 곧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이다. 또한 소위 말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정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단지 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채 정상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주류로 존재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양성평등이 이뤄졌다고, 혹은 지금 이 정도로도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과거에 모든 이들이 단지 '지금 이 사회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우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좋게 좋게 넘어가고, 적응하며 살자'라고 말했다면 사회는 결코 진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가 사회의 감춰진 부분에 대해 불편해하고 그것을 당면한 문제로서 제기하고 이에 저항해왔기 때문에 사회는 진보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양성평등도 여성주의라는 불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의 비대칭적 권력구조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배제와 차별의 문제를 표면으로 끄집어내고 이에 대한 저항을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학내에서 여성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기구는 바로 총여학생회다. 여성주의 언론을 발행하고, 여성주의 단체를 지원하고, 이성폭력학칙 개정과 생리결석제를 현실화시키는 등 총여학생회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장애여성운동과 레즈비언 운동 등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단순히 총여학생회라는 대표 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총여학생회에 학생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총여학생회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이 곧 총여학생회의 폐지라는 극단적 결론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총여학생회가 바뀌어야 한다면, 그것의 주체는 학생들과 총여학생회 내부의 활동가들이 되어야지, 총학생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극단적 페미니즘' 운운하며 여성주의에 대한 편견으로 똘똘 뭉친 총학생회가 총여학생회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학내에서 여성주의가 일상화된다면, 굳이 총여학생회라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진심으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다.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공동체 [여성목망실천단]

[언니네 통신] 총여학생회를 없애자고?

스산한 날씨에, 또 하나의 심란한 소식이 도착했다.

연세대학교 최종우 총학생회장(이하 최종우)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를 폐지하고 총학생회 산하의 성평등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종우는 이에 대한 근거로 1) 총여학생회의 극단적 페미니즘, 2) 총여학생회의 극단적 페미니즘이 야기한 학생들과의 괴리, 3) 총여학생회의 견제 기구가 없음, 4) 총여학생회가 남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로 여학생들이 수혜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 위배와 역차별 논리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을 임명해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성평등위원회를 꾸리고, 단과대별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극단적 페미니즘을 지양'하고 '총학생회 대의제를 통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들의 대표체이자 자치기구인 총여학생회 존폐를 결정하는 이 투표에는 남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제공된다. 총학생회는 남학생들도 돈을 내기 때문에, 투표권 역시 있다고 주장한다.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총여학생회장이 참가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는 이미 투표 실시기간마저 일방적으로 공지한 상태이다(2007. 3. 24. 오후 1시 기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언니네트워드는 다음과 같은 견해와 요구를 갖고 있는 바이다.

첫째, 성평등 위원회 구성이 대안이라면, 총학생회는 어떻게 총여학생회의 극단적 페미니즘과 차별되는 '성평등'을 추구할 수 있을지를, 투표에 앞서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현재 총학생회는 총여학생회에 대한 남학생들의 반감에 편승해서, 총여학생회를 극단적 페미니즘이라며 상투적으로 몰아붙이고 자신들은 그것과 차별되는 방식을 하겠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극단적 페미니즘이라고 판단하는 총학생회의 모습은 그들이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성평등 위원회'인지 '성차별강화 위원회'인지 헷갈리게 한다. 총학생회는 어떻게 총여학생회의 '극단적 페미니즘'과 완전히 결별하면서, 여전히 '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총학생회는 비전 제시도 없이 남들 욕하는 걸로만 점수를 따려 하는 알팍한 수작을 그만 두라.

둘째, 총학생회는 견제조직의 문제를 가지고 조직 형태 상으로 총여학생회보다 성평등위원회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견제 조직의 여부는 대의제 민주주의 절차에서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에 견제조직이 없어서 문제라면 당연히 단과대 여학생회나 과 여학생회 건설을 고민할 문제이지, 왜 그 이야기가 총여학생회 폐지로 직결되는가. 단과대 성평등위원회 건설이 그렇게 쉽게 가능하다면, 단과대 여학생회 건설 역시 쉽게 가능할 것이다. 견제조직의 유무는 총여학생회 존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셋째, 총여학생회는 전체 학생회 체계 안에서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보하며 총학생회를 견제하는 조직이다. 그 특수성에서 총여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나 확대운영위원회 이상으로 총학생회의 중요한 견제조직이며, 총여학생회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긴 역사가 있다. 총학생회가 진정 절차적 민주주의와 견제 조직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자기 견제 조직의 존폐를 이렇게 쉽게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 총여학생회에 대한 이번 논란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등 자신의 견제조직과 한번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자기 견제조직의 존폐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그런 총학생회가 총여학생회에게는 견제 조직이 없음을 빌미로 삼는 행태는 보기에조차 낯 뜨겁다.

넷째, 총학생회가 여학생 투표가 아닌 총투표를 주장하는 근거는 단 하나, 예산 문제이다. 총학생회는 남학생들 역시 총여학생회 예산을 학생회비 명목으로 내고 있으니 총여학생회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갖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역차별이라는 논리다. 그 논리 앞에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자치조직이자 대표기구이며, 그 결정은 여학생이 해야 된다는 당연한 상식조차 무시되고 있다. 총학생회는 스스로가 학생들의 자치조직이며 대표체이면서도, 자치와 대의제의 기본조차 망각하고 있다.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 예산 자체부터가 여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기 때문에, 차별 범주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정책적 상식은 말할 나위도 없고 말이다.

총학생회는 돈 낸 만큼 투표권도 있다는 주먹구구식 계산 하나만으로 논의를 밀어붙이면, 내용성에 대한 비전 제시나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생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총투표를 통해 존폐를 결정짓자고 주장하며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라 주장한다. 총학생회의 막대한 예산을 정책적인 상식도 없이 주먹구구식 계산만으로 밀어붙이며, 오랜 기간 학내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온 기구의 존폐를 총투표 공지와 실시로 결론을 내렸단다. 그러면서도 가상하게도 자신들이 '중우정치'는 아니라는데 어찌 '중우정치'라는 말을 입에 담는지, 일면식도 없는 처지지만 이 정도 자가당착이라니 슬며시 걱정까지 되려 한다. 총학생회장도 잘 알다시피, 이제는 '연세라는 자랑스러운 이름만으로' 존제가 보장되던 시대가 아닌데, 이 험난한 시대 어찌시려는지.

사족, '연세라는 자랑스러운 이름만으로' 존제를 보장하려 했던 허접한 엘리트주의를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총학생회장이 연세대 학생들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더 부끄럽다(<연세 사회에 드리는 글>에서 최종우 총학생회장은 더 이상 '연세라는 자랑스러운 이름'만으로 우리의 존제가 보장되진 않는다는 생각이 무섭게 들었'다며, '현실의 벽'을 넘어 서기 위한 방편으로 이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때 학벌에 안주했으나 이제 사회가 녹록치 않으니 모두 뚫뚫 뭉쳐 뭔가를 해보자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총여학생회를 없애자는 것이라니, 논리적으로는 허술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뭔가 이해는 된다. 학벌주의에 기대는 엘리트주의가 안 먹히니, 괜히 성평등이니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아껴서 알뜰하게 살아보자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을 재현하는 총학생회장을 대표로 둔 연대학생들에게 위로를 표한다.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

www.unninet.net



컴 투게더

총여학생회 폐지에

반대한다!

총여를 총투표로 없앤다고?

다른 건 다 모르겠다.
나에게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온 건 다수결의 힘이었다. 어떤 기구의 존재를 다른 구성원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니.

소수자들은 언제나 굶신거리며 불쌍한 척을 하는 게 아니면,

우아한 힘있는 자들의 폭력을 견디며 끊임없이 설득해야만 하는 건가?

학내 이성애중심주의에 문제제기를 하는 총여를 그리 쉽게 없앨 수 있다면, 만약 컴투게더가 중앙동아리가 되어 이성애중심주의를 조종하는 성소수자 파티라도 하면 투표로 컴투게더 회원들을 배출해 퇴학이라도 시키지 않을까?

난 "요즘은 여성 상위시대야"라고 말하는 사람과, 성폭력의 위협 속에 사는 여성이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동성애 그거 변태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이 변태인 건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투표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by_이영, 컴투게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잖아?

한국에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속담이 있다. 과연 그럴까? 정말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댄다?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까?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에서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대지도 못하고 죽고, 쥐는 겁에 질린 채 그냥 고양이에게 잡아먹힌다.

결산도 제대로 못하는 총학이 어렵게 짜낸, 오타와 논리적 허점으로 가득한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연세대학교 내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의 거대한 발바닥으로 학내 소수자를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다. 다수자들은 과연 알까? 그 가끔의 꿈틀댄이 얼마나 어렵게 쥐어짜낸 간절한 목소리라는 것을.

총여학생회는 끊임없는 억압 속에서 가끔씩 꿈틀대는 것이 아닌 애초에 짓밟는 자가 없도록, 억압하는 자가 없도록 연세대학교와 세상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기구이다. 그리고 억압의 사슬을 끊음으로써 해방되는 자는 여성만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 그 사이의 자들, 그 밖의 자들 모두가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WoW총학이 주장하는 성평등위원회는 총여학생회를 대체할 수 없다. 세상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힘은 직접 선거에 의해 강하게 부여 받는다. 성평등위원회처럼 중운위에 의해 추천되고 학운위에 의해 인준 받는 것으로는 충분한 힘을 부여 받을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연세대학교에는 생존해야만 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침묵당하고 있다.

컴투게더: www.queeryonseil.net

저희도 함께 폐지하시렵니까?

- 회칙개정 총투표와 총여학생회 폐지론의 신중한 접근과 열린 사고를 촉구하며 -

우리는 지난 12월 연세대 본관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을 때, 한아름 글을 읽고 어려운 걸음을 해주었던 총학생회 부회장님을 너무나도 감사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총학생회가 여러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공대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연세재활학교 중학교 개설과 신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가 3월 19일 연세대 연세춘추를 통해 발표한 회칙개정 총투표와 총여학생회의 폐지론에 그 파장과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활학교 학생, 학부모들은 사회의 소수자로서, 또 연세의 소수자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 '공대위'를 꾸릴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서 특히 총여학생회 폐지 주장에 대해 그 의도와 목적을 떠나 총학생회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조심스레 발언하며, 열린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모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학생회가 이 문제를 아무리 학내 문제이며 학생들끼리의 자치 문제라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남녀 평등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 소수의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총여학생회와 같은 당사자 정치 조직이나 학내 풀뿌리 단체들을 더욱 지지하고 양성해야 하는 것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생사회 운영을 추구하는 작금의 총학생회 목적에 보다 충실한 것 아닐까요? 설사 총학생회가 여학생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집행부를 여학생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직접 투표로 선출한 사람들보다 8000여 명의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총학생회 스스로 권위와 대표성을 상실하고 언제든 학교 당국의 부서로 임명되어도 좋다는 뜻이며 연세대 여학생은 자치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8000여 명의 여학생들의 자치조직조차 다수결의 권력 논리와 행정능력을 근거로 다른 선택 여지없이 긴 논의 과정없이 폐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그 현실이, 그 용기가, 그 권력이 걱정스럽습니다.

연세재활학교는 70여 명 밖에 안되는 학생을 위해 학교를 신축하고 중학교 과정을 개설하기까지 한 달간의 농성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지리한 논의 과정과 학부모님의 외로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의료원이나 연세 재단이나 심지어 총학생회조차도 우리를 대변해주거나 직접적으로 지지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사자, 연세재활학교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힘과 조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교사, 졸업생들이 당시의 현실에 안주하며 외면했기 때문에 수많은 6학년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부디 지금의 총학생회는 이러한 기성세대의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권과 평화, 또는 통일, 소수자의 보호라는 정의는 늘 정치적으로 쉬이 이용당하거나 여론의 편에 따라 소용돌이쳐 다뤄져왔습니다. 절차의 민주주의, 제정의 투명성은 늘 혁신해야 할 가치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이러한 정의가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국가 3권 어디에서부터든 독립되어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듯이 오히려 대표성이 강한 권력이라면 이런 절대적 가치를 옹호하게 지향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사회적 소수의 피해자는 그 피해에 민감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이 가해자인 줄도 잘 알지 못하며 피해자의 목소리에 둔감합니다.

처음처럼 연세대 총학생회가 모든 연세 가족의 의견을 치우침없이 경청하겠다는 바로 이러한 사회의 소수자의 '감수성'에 대해 보다 민감해 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의 이름으로, 소모임의 이름으로 자보 한 장, 플랜카드 하나 걸때에도 학교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눈치 보게 하는 학교 당국의 입장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여론과 다수라는 근거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다수결의 합정과 정치권력의 힘에, 그 지혜로움을 잊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그 여론과 다수라는 무기 앞에서는 장애인이나 다른 소수자의 보호는 정치적 구호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며, 당사자들에게는 그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시혜와 동정이라는 상처만을 주기 때문입니다.

연세 재단이 모두 모르쇠에 일관할 때, 유일하게 손을 잡아준 총여학생회가 극단적 폐미니즘을 주장하고 여학생을 옹호해 대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면 우리 모두 그 폐지론의 공범(共犯)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동자입니다. 연세재활학교 문제로 많은 시간을 빼앗겼고 민주적인 절차를 일정 무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가 권력의 욕심이 아니라, 발전된 민주주의와 자치를 위해 이번 일을 한다면 더욱 이번 폐지론의 공범은 우리들입니다.

연세재활학교학부모회/장애인참교육부모회/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연세재활학교장애인과교육권확보를위한학생연대「공존」

총/여/ 학생회 이야기

학생회는 왜 존재할까?

우리는 몇 백 만원의 등록금을 마련해서 대학에 들어온다. 대학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사회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직업으로 생존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올해 8.7%나 인상된 등록금이 용도를 알 수 없는 5-5-10 프로젝트 등에 들어갈 뿐, 당장 자신의 수업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 동감할 것이다. 인상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험 실습비, 입학금의 용도에 대한 공개 요구조차 학교 당국은 이유없이 묵살하는 권력을 가진 것이다. 이 속에서 학생들은 "교육권"을 지켜내기 위해, 대의기구인 학생회를 구성한다.

당신에게 있어 "교육권"은 무엇입니까?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권이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동아리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 동아리 홍보가 가능한 다양한 게시판 등일 것이다.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구성하는 성적체성, 성별, 몸의 외적 구성 등이 어떠한 차별적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교육권"이다. "앞으로 정치할 사람은 마누라 간수 잘 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교수의 수업을 들을 때, 특정 성을 관리의 대상으로서 칭하는 것에 불쾌해진 학생들에게 "교육권"이란 그 교수에게 행해지는 반성폭력 의무 교양 혹은 처벌이며, 자신의 문제제기를 '민감함'으로 치부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학생회의 존재 이유다. 학교 당국은 5개의 학과가 10년 안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학내의 자치 공간 부족, 남성중심적 관계 속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대학 안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교육권"이 학교 당국의 '발전 논리'보다 우선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 학생회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총여학생회는?

하지만 단 하나의 학생회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어떤 교육권은 단대 학생회 속에서, 자신이 속한 동아리 속에서, 자신의 생물학적으로 규정지어진 성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장에 유무 속에서 이야기되기도 한다. 총여학생회도 이런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다양한 학생회 중 하나다.

총여학생회는 말 그대로, 학내 여성들의 "교육권"을 이야기하는 곳이다. 단 하나의 예로, 생리통이 심해져도 검은 봉지 속 닫겨 있는 생리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해, 결석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권" 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생리 결석계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 당국이 생리 결석계 시범 운영 시행과 생리를 금기시하는 학내 분위기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것이 "모든 학내 여성"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른다. 누군가는 생리 결석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결석 사유에 생리통이라고 적혀서 제출했는지 모른다. 누군가는 생리통이 없어서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생리통이 너무 심한데도, 자신이 생리통 때문에 결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한다. 여기에서 그 '누군가' 중 어느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교육권"에 있어서 다수의 논리가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호모토피아로 인해 레즈비언의 교육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수의 여학생'과의 '괴리'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장에 학생의 수가 '적다'라는 논리로, 장에 학생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수동문을 자동문으로 바꾸는 것이 '예산 낭비'로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전체 학생'들의 단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 이것이 총여학생회 존재 이유입니다.

총여학생회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지하며, 소통하고자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중도에서 물려 카메라를 조심해야 하고, 치마를 입었을 때 '단정히' 앉아 있어야 한다는 억압에서 벗어난 여학생 휴게실이라는 공간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억압을 만들어내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 사회에서 왜 '장'이라는 타이틀 속에서만 '남성',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단 하나의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항의한다. '새내기 레즈비언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플랑 하나가 생세이션을 일으키는 학내 상황에서 레즈비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총여학생회는 줄거 이야기하는 "전체 학생"들의 의견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은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학생들과의 괴리'도 아니다. 모두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목소리들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묻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차별이나 억압으로 다가가 "교육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총여학생회의 존재 이유고, 총여학생회가 19년 동안 활동해온 이유인 것이다.

경계에서 숨쉬는 색다른 가능성
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

